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 개요

가.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 행정집행의 감시통제 기능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봉사 행정을 유도하며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에 있음

나. 기간

- 1998. 11. 26 (목) ~ 12. 2 (수) (7일 간)

다. 대상기관 : 시청 4실 9과, 3개 구청 6과, 35개동

-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읍부즈만실, 회계과
-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농사지원사업소
- 세무국 : 세정과, 부과1과, 부과2과, 징수과
- 원미구청 : 총무과(총무, 민방위·사회진흥, 통신전산분야 제외), 지역경제과(교통행정, 교통지도분야 제외), 동사무소
- 소사구청 : 총무과(총무, 민방위·사회진흥, 통신전산분야 제외), 지역경제과(교통행정, 교통지도분야 제외), 동사무소
- 오정구청 : 총무과(총무, 민방위·사회진흥, 통신전산분야 제외), 지역경제과(교통행정, 교통지도분야 제외), 동사무소

라. 감사반 편성

- 감사인원 : 15명

- 편성현황

위 원 장	위 원	사 무 직 원
김덕균 의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의원	전문위원 : 한기석 사무직원 : 이병주 속기사 : 배남준 " : 박윤주

마.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내 용
98. 11. 26(목) 10:00~	○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 음부즈만 실, 회계과	기획재정 위원회실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11. 27(금) 10:00~	○ 지역경제국 :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사 업소	"	"
11. 28(토) 10:00~	○ 원미구청 : 총무과, 지역경제과, 18개 동사무소	구청 회의실	"
11. 30(월) 10:00~	○ 세무국 : 세정과, 부과1과, 부과2과, 징 수과	기획재정 위원회실	"
12. 1(화) 10:00~	○ 소사구청 : 총무과, 지역경제과, 10개 동사무소	"	"
12. 2(수) 10:00~	○ 오정구청 : 총무과, 지역경제과, 7개 동사무소	"	"

2. 감사 착안 사항

관 련 부 서		감 사 착 안 사 항	비 고
국(실)	과(실)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감사추진 및 내실화 • 공무원 비위예방과 대책 • 감사기능의 적정성, 전문성 확보 •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구청포함
	정 책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 운영 • 종합관찰제 운영관리 • 각종 시정추진 계획의 투명성 확보여부 • 경영수익사업 효율성 및 특별회계관리 적정성 • 지방채, 풀보조금 등의 운영관리 • 투자심사종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타당성 • 법무행정 전반 •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업무 전반 	"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현장방문단 운영현황 • 시정홍보 및 간행물 제작의 적정성 • 시보 및 시정소식지 발행의 효율성 • 스튜디오 운영 현황 • ARS 여론조사 현황 •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실적 등 기타 	"

관련부서		감사착안사항	비고
국(실)	과(실)		
	회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의 도급 및 물품의 매매대차와 기타 계약사무 • 용역발주 집행내역 • 시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 공공건물 사용 및 임대현황 • 각종 사무기기 수리내역 • 차량관리 현황 	※ 구청포함
	음부즈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
지역경제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대책 및 저축업무 •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태 •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 •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 가스안전관리 추진업무 •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사항 •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 • 실업대책상황실 운영 	"
	국제통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 기술유치 현황 및 실적 • 해외수출활동 지원실적 • 국제교류도시간 공무원 교환 연수 현황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통상협력사업 • 민간단체간 국제교류사업 현황 • 부천시 공동상표 현황 •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현황 등 기타 	"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공장등록 현황 •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 추진현황 •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 • 산, 학, 관 기술개발 추진 • 관내기업체 생산품 전시직매장 운영현황 	"
국	농산지원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사항 •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 • 젖소 및 농작물경쟁력 제고사업 • 가축 방역사업 	"

관련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국	과(실)		
세무국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지방세 결손처분 • 각종 채권의 유형별 현황 • 탈루은닉세원 조사현황 및 징수실적 • 세외수입 종류별 세입액 및 체납액 •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 세무비리 관련 구상권 행사현황 • 징수 유예조치 내역 • 과오납 처리현황 • 지방세 징수업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방세 체납원인 • 지방세 감면현황 • 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한 현황 • 여유자금 예치현황 	
	부과1과		
	부과2과		
	정수과		

3. 감사결과

가. 총 지적건수 : 84건

○ 본청(4실 9과) : 52건

○ 구청(3구 6과) : 32건

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시·구	공통사항	<p>○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정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전 및 감사중에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내용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이고 또한, 자료의 전후좌우의 계수가 오차없이 정확하여야 함에도 근거자료가 불확실하고 계수에 오차가 있어 잣은 감사중지를 초래한 바 있어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요청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시·구	공통사항 감사실 정책기획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반복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명예감사관제 폐지 또는 운영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감사관제의 운영취지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정보수집을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있으나 그 동안의 추진성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바 시민감사청구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명예감사관제의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심사위원회는 정계를 당한 공무원이 관용을 요구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관용을 배풀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실감경” 처분을 결정하는 내용과 유사함. 따라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시 자체감사시 감사반원의 전문화 및 직급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또는 행자부의 감사시에 자체감사 때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시 자체감사의 감사기법 미흡, 감사분야별 전문성부족, 감사반원의 하위직급 구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시 자체감사시에는 감사반원을 현재의 직급(분야별 7급)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상위직(분야별 6급)으로 구성하고 감사기법을 개발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각종 기금 및 잉여자금 운용의 효율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과 잉여자금의 애탁 운용을 일률적으로 시금고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타금융기관과의 이자율 비교분석을 통해 안정성 있고 이율이 높은 예금종류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운용하기 바라며,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운용을 기금과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자금운용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바람, ○ 사고이월 처리시 사고이월 사유의 신중한 분석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이 “절대공기부족”이나 “사업발주지연” 등으로서, 이러한 원인은 담당공무원의 사전예측 미흡과 업무지연 또는 업무태만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연도폐쇄기 후 파악 작성하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관계공무원의 과실을 규명 지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바람. ○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을 위해 예비비로 14,000천원을 지출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경영수의사업 특별회계기금 예산편성 및 지출의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수의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선정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경영수의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니 향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시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란 관리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이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즉시 수정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즉시 수정조치 바람. ○ ARCS조사의 정확하고 적합한 조사를 통한 정책활용도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CS조사의 성격과 목적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 위주로 조사하고, 적절한 조사안을 작성 수행함으로써 ARCS조사의 오차를 줄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바람. ○ 복사문 부천 발행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문 부천에 광고개재를 통한 운영비 조달을 고려하고, •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발간주기, 편집내용 등을 검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반상회보와의 중복을 피하고 종이재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가능한 부천시 관내 인쇄업체에서 인쇄토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자실 운영경비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실 운영경비가 97년도에 11,779천원, 98년도 10월 말 현재로 10,618천원으로 과다하니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 기자실 이용에 지역 주간지 기자가 배제되는 등 기자실이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강구 ○ 건설공사 입찰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구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95건 중 8건만이 관내 건설업체에 낙찰되어 발주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관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물가조사에 의거하여 편성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찰가를 90%로 거의 맞추어 입찰, 발주한 것은 담합의혹과 예정가 누출, 나누어주기식의 발주로 사료되므로 개선을 요망함. ○ 용역비 절감 및 용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부득이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공사에 대해서도 모두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설계를 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용역비 지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도 : 29억5천만원 97년도 : 51억7천만원 ○ 임차보증금 회수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F 이후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우리 시 임차보증금(총74 억원)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하도급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의무비율 준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관내의 전문면허 보유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잣은 설계변경 억제 및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한 공사가 총 발주공사의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사업비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억제하여 주기 바라며, 설계변경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는 방안 강구 ○ 관용차량 운영의 효율화 및 차량유지비 절감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세무국	세 정 과 부 과 1 과 부 과 2 과 정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목적과 사용부서가 차량별 지정되어 있지만 신규구입 차량을 집중 이용하고 있고 오래된 차량은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통합하여 풀(Pool)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적극 개선책을 강구하고, 차량 유지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p>○ 지방세 세입 추계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지방세 결손 예상액이 668억원에서 하반기 9월 30일 현재 결손예상액이 606억원으로 조정된 반면에 주민세와 재산세등 각 세목의 상반기 추계와 하반기 실적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시세 결손 추계액이 140억 94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정확한 추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기 바람. <p>○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잉여자금 등 여유자금의 운용을 자금사용의 목적,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안정성 있고 이율이 높은 예금종류를 선택, 예치함으로써 이자율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p>○ 정수유예처분 감소대책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유예 처분이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평균 2만여 건으로서 과다한데 송달불능자에 대한 별도 전산관리를 추진하는 등 정수유예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송달불능자 수를 줄여 나가기 바람. <p>○ 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3 부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에 의거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나 최근 결손처분이 증가하는 추세로 처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함.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무서와 협조를 통해 원천적으로 주민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기 바랍니다. ○ 송달불능에 의한 징수유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98년도 지방세 징수유예 사항을 보면 4만 600여 건에 금액으로는 27억여 원에 이르고 있고 징수유예 사유를 살펴보면 송달불능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전국 6대 도시의 인명과 업종별 전화번호를 수록한 CD롬과 전화를 이용하여 지방세 부과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지방세부과 또는 체납자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지역 전출자의 전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송달불능에 의한 징수유예조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득세, 등록세 신고시 FAX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세무국 신설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3개 구청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니 3개 구청과 본청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상급기관의 지방세제 개편예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지방 상급기관의 지방세제 개편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여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세무비리관련 구상권 행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 부천 세무비리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횡령액 환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지역 경제국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감소를 위한 체납액 징수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3만여 건에 378억여 원으로서 과다하니 체납액 징수독려를 통해 체납액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지방세 감면조례 홍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세 감면조례의 내용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 해소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이전과 동시에 차적지 주소이전이 시행되기 전의 차량은 수취인 불명 등 주소불명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적지 일재 정비 등을 통한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 시급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지역경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실업대책 관련기구 운영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98. 8. 5부터 텁별 회의를 주 1회 이상, 부시장 주재 실업대책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실업대책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 노력 미흡이 원인이므로 각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등 민간기구의 창의성을 적극 도입하기 바람. ○ LPG 체적거래제 실시에 따른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체적거래제를 실시할 경우에 추후에 LNG로 교체할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p>시 배관 일체를 도시가스 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제시 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설비의 이중부담을 이유로 기피되고 있는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축과 협의를 통하여 LPG 시설을 LNG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p>○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음. <p>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재 기업주의 변형근로로 인한 상시고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신규고용의 억제효과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p> <p>○ 외국인 노동자 실태파악 및 관리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2,3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바 사회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p>○ 고용촉진훈련생의 적정한 선발 등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훈련에 가정주부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취업의지가 있고 국가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사람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훈련생의 선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부천시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고용촉진 위탁훈련기관을 선정토록 할 것. •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로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한 구인·구직이 되도록 취업알선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설)		
	기업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대책 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용도가 미흡함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별로 활동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의 관리를 시가 총괄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 ○ 기업지원시책을 위한 기업체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기업지원 관련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장 행정을 통하여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 모든 기업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 실질적인 통계조사를 병행하여 기업체 관련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하여 현재 기업체가 당면한 기업활동에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는데 중점을 두어 기업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기업지원시책 홍보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체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FAX와 우편 등 홍보물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 산업기술지도 관내대학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 애초 기술지도·경영지도 및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관내에 소재한 부천대학과 카톨릭대학교에서도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APT형공장 분양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T형공장 입주 대상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분양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바람.(현재분양률 30%)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국제통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에서 101억원을 농협에 출연하여 200억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일선하고 있으나 대출이율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비해 높으니 대출이율을 낮추고 상환조건을 기업체에 유리하도록 하며 융자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중소기업체를 직접방문,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체득하여 이를 기업지원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정례화하는 방안검토 ○ 국제화재단 출연금의 적극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가 국제화재단에 매년 1,25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사항이 극히 적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요구하여 출연금 활용을 극대화해 주기 바람. ○ (주) Day Time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가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 Day Time의 공동규약상에 신규업종, 신규업체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규약을 개정하여 신규가입을 허용,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 적극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부천시가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구매상담회,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좋은 시책을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관내 다수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을 엄격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주 일 간 자리를 비우고 해외방문을 실시한 것은 행정공백을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원미구	총무과	<p>장기간 초래한 것이므로 향후 공무원의 해외방문 요건을 엄격히 시행할 것.</p> <p>○ 1년 4모작 가능여부 검토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에 벼는 이양해서(조생종벼) 8월 첫수확 한 후 바로 물 대기 작업 후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11월에 2번째 수확을 올리고 나서 비닐하우스 설치된 논에 겨울에 시설 채소를 재배해서 연중 4회 이상 수확이 가능함. 우리 부천 시에서도 시범포를 선정해서 1년 4모작 가능성 검토바람. <p>○ 행정소송 패소방지를 위한 업무연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 패소사건이 4건에 이르고 있는 바 패소사유를 살펴보면 위법사항과 재량권 일탈사례 등으로 이는 업무에 따른 법령의 연찬이 되지 않은 결과로 •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공무원은 업무연찬에 충실히 할 것이며,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p>○ 방송장비 중복구입 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청 입주 이전에 본청에서 6천만원의 예산으로 방송 시설을 보수 설치하여 사용하다 원미구청에 이관하였는데 원미구청에서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장비를 시설하였고 그중에 7300만원 상당의 설비를 기존시설과 중복하여 구입 설비하였는 바, • 중복구입장비 중에 13종 2500만원 상당의 장비가 아직도 미 활용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활용되도록 조치 바람. <p>○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감독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도 관용차량의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중복지출, 필요이상의 수리 등 불분명하게 지출된 사례가 많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자양,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간 도로복구 예치금의 관리에 있어서 5년이 경과된 미반환 예치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잡수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현금 보관하면서 세입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세외수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정바람. ○ 홍보개시판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 내 21개 홍보개시판에 부착된 각종 홍보물이 대부분 시의성(時宜性)이 떨어지는 홍보물이 게시되고 있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구 발주공사의 잣은 설계변경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정확한 물가조사와 산출근거에 의거 설계하여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심의조직을 통하여 심의 후에 조치바람. ○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지정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실제 필요한 직종을 선택하고 취업률이 높은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취업의지가 있는 실직자를 중심으로 선발 중도 탈락자를 방지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취업정보센터는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상담하기에 다소 협소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고용정보시스템에 ISDN망을 설치하고 반드시 구직정보를 제시하기 바람. ○ 물가모니터요원의 활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 	각 구청 공동 각 구청 공동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소사구	총무과	<p>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물가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미관을 고려한 농작물의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신도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농작물 경작시 농산지원사업소와 협조하에 경작자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조치바람. ○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총 31대로 97년도 수리비가 30,908천원이며 연간 대당 수리비가 평균 106만 5천원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체계있는 차량관리를 통하여 과다한 차량 수리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심사분석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사무자동화 및 전산교육을 심사분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 건설사업 중 심곡본1동 청사신축에 따라 98년도에 4회에 걸쳐 설계변경하여 총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3/4분기 심사분석 자료에는 당초 공사비로 관리되는 등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심사분석을 보다 내실화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관용차량 정비업체를 다변화하여 예산절감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 수리는 보성카에 대부분을 의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수리비용이 일정치 않으므로 정확한 근거에 의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타 정비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 고용촉진훈련 	
	지역경제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오정구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교육시키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98년도에 91,000 천원을 투입하여 356명을 위탁 교육하고 수료자 24명 중 1 명을 취업시킨 바, • 취업률이 저조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것은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부족으로 판단되니 취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p>○ 가스판매업소 단속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사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단속지도의 소홀,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을 들 수 있는 바, 형식적인 단속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주기 바람. <p>○ IMF 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내 IMF 쉼터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 IMF 쉼터는 관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p>○ 소비자 보호 업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고발건수가 연 1회 밖에 안 되는 것은 홍보부족이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 구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폐지하고 본청 또는 소비자고발 센터(민간운영)에 연결하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p>○ 행정처분의 적정하고 명확한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의 폐소사례를 분석해보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 취소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폐소의 원인이 관계법령의 연찬과 충분한 업무숙지가 되지 않는 경향으로, 	오정구 공통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오정구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연찬과 세밀하게 업무를 숙지하여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오정구의 문화적 공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여건으로 • 주민복지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정복지회관을 문화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운영하고, • 오정구청 신축예정 부지를 간이 사회체육시설공원으로 시설이 되도록 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 관찰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 • 공매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원종1동에 소재한 TV경마장 건물을 매입하여 오정구가 당면한 보건소 이전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오정구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예산낭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본동사무소의 증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15만 6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급 판정을 받아 증축하지 못함으로써 215만 6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관용차량 운행 및 수리비 과다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 후에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계획없이 수리를 하고 있으며 • 경기 37가 6526호의 경우에는 97년도 연간 수리비가 46십여 만원이 소요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차량운영 일지상의 관용차량 운행거리와 연료소비량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운행 관리와 불필요한 차량 수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실)		
		<p>리비의 지출이 안 되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발주시 고액낙찰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발주시 예정가의 90% 이내로 낙찰되고 있어 의혹의 소지가 있으나, • 오정구의 경우 90% 이상, 97.14%로 낙찰된 것은 예산절감 의지의 부족이라 사료되므로 시정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구입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서 구입하여 배부되는 농약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이 아니어서 일부 창고에서 사장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 관외거주 영농자에게도 농약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실업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대책상황실이 3개반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6명만이 상황실 근무중이며, • 실업대책회의를 1회만 개최한 것은 전 사회적 문제고 실업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이므로 시정하고 실업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 물가안정 관리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물가안정관리 부적합업소 255개 업소에 대한 조치중 14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의뢰한 것은 행정의 편법 짐행이므로 시정하고 자율적인 물가안정이 이뤄지도록 지도바람. 	
세무국	세정과	○ 이월액의 연도별 항목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이월액과 익년도 초기 이월액은 개념상 당연히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항목 및 총액이 매년 불일치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도 상호 불일치하고 있음. 이는 결산상 중대한 결함이며, 특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심각한 문제임. 개선바람. 	
	부과1과		
	부과2과		
	정수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시·구	과(설)		
		<p>○ 과년도 수입에 대한 관리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말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과 당해년도, 과년도 수입 장부 결의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어느 금액도 정확한 체납액 총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당해년도 초 체납세금 총액에 대한 Data를 갖지 못한 채 적당히 과년도 수입예산을 세우고 적당히 징수결의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해년도 예산의 적정성 평가가 불가능하며 체납액 징수노력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여 실무상 예산이 징수될 정도 만 징수결의함으로써 세입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세출예산에 세입을 맞추는 듯한 인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편성의 혼란으로 기획력을 발휘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함. 특히 중·장기 계획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부기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니 개선바람. 	

다. 동장 건의사항

- 노후 동청사 보수필요
-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7급 1인 정도는 능력있는 공무원 배치요망
- 동사무소의 인구, 면적, 용도지역(주거, 균린생활, 공업) 등을 고려하여 동 근무인력 배치(일률적 인원배치 반대)
-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요망(중동사회복지회관)
- LG백화점 민원실 공무원을 현재의 중1동사무소 직원 파견에서 시 행정에 대한 상담 능력이 있는 시, 구소속 여직원으로 변경요망.
- 영화제 후원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음.
- 일률적, 강제적으로 교육하는 새마을교육생 차출 중단
- 단속권한이 없는 동사무소 단속업무는 과감히 동에서 구로 이관 필요
- 각종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무리한 인원동원 금지
- 공무원의 재교육 투자비용을 확대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필요

- 일선 행정조직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요망

4.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시의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3대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원들의 감사기술은 날로 향상되는데 비해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은 과거 답습의 행정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
-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IMF 경제체제하에 조직축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나 생활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 자신의 능력개발을 소홀히 하고 전례답습의 행정행태를 계속할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의 동료공무원에게 뒤떨어지고 말 것임.
-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천시민의 권익향상과 부천시 발전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하며 협력하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행정복지위원회 >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일반사항

가.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2,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을 감시, 통제함에 있어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1998. 11. 26 ~ 12. 2 (7일 간)

다.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선 정 (당연) 기 관	본 회 의 송 인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국 -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 복지환경국 -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 사업소 -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 구청 : 원미, 소사, 오정구청 -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각 동 · 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해림원 · 성가요양원 · 사회복지관(6개소) · 노인복지회관(2개소) · 시립어린이집(13개소) · 부천문화의집 · 새소망소년의집 · 새마을문고중앙회부천시지부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

라. 감사반 편성

○ 감사인원 : 11명

○ 반 편성

위원장	간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원
서영석	박종신	류재구, 김부희, 오효진, 강태영, 박노설,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 : 김애자 • 직 원 : 정송훈 • 속 기 사 : 이나미

마.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8.11.26(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행정복지 위원회실	현황보고, 질의답변
98.11.27(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환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행정복지 위원회실	"
98.11.28(토)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구 청 회 의 실	"
98.11.30(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행정복지 위원회실	"
98.12.1 (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정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구 청 회 의 실	"
98.12.2 (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구 청 회 의 실	"

2.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국	과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민원 접수 처리실태 • 96년, 97년 세출예산 집행실태 • 기금운용실태 • 위원회운영실태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 구청 포함
행정지원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 시비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사무 인계인수 처리 •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지도감독 • 인사위원회 운영실태 • 공무원 구조조정 및 공무원 관리실태 • 각종 사회단체 및 위원회 운영실태 • 통·반장 관리 지도 및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설치 운영 •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지도 • 시장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교육훈련 및 편성 운영 • 민방위대 조직 편성 •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 유지 관리실태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추진실태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
국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통계조사 추진실태 •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 • 지역정보센터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및 지역정보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실태 • 공무원 정보화 능력제고 추진사항 • Y2K 준비사항 	"

관련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국	과		
복 지 환	시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민원 접수 처리실태 • 전화민원 접수 처리실태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관리 •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관 및 다목적 복지시설 운영관리 • 사회복지 전문요원 활용실태 • 의료보호대불금 업무 •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 청소년보호 및 학원폭력근절에 관한 사항 	※ 구청 포함
	여성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실태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 결식아동 지원실태 • 노인정 운영실태 및 노인복지업무 추진사항 • 보육정보센터 추진사항 • 여성교양교육 및 경제교육 • 주부취미교실 및 취업교실 운영실태 • 어린이돌이터 관리실태 	
경 국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회 및 관련단체 지도육성업무 • 생활체육협의회 및 관련단체 지도육성업무 • 부천체육관 운영 관리 • 시민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 운영 사항 • 문화의집 운영관리 • 기타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업무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추진사항 •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 •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 공중이용시설 관리업무 • 하천 수질오염 관리 	

관련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국	과		
사 업 소	녹지공원 관리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 녹화사업 • 옥상녹화사업 추진 및 관리 •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 수목식재 및 관리실태 • 조경사업 추진사항 • 공원, 녹지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 	※ 구청 포함
	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도서관 운영실태 • 도서대출 및 회수 • 도서관 홈페이지 개설 추진사항 • 독서진흥 관련사무 	
보 건 소	원미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업무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추진사항 •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무 • 의료장비 가동실태 및 순회진료 실시사항 • 방문간호사업 추진실태 • 특화사업 운영실태(치과진료) 	
	소사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업무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추진사항 •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무 • 의료장비 가동실태 및 순회진료 실시사항 • 방문간호사업 추진실태 • 특화사업 운영실태(방사선 및 임상병리분야) 	
	오정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업무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추진사항 •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무 • 의료장비 가동실태 및 순회진료 실시사항 • 방문간호사업 추진실태 • 특화사업 운영실태(여성클리닉 운영 등) 	

3. 감사결과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인수인계 규정 준수 철저 사무인수인계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속 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무인수인계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계 인수규칙의 제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람.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 구성 철저 인사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민간인 포함) 운영되지 않 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바람. 	
지방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97년에 비하여 98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을 구하고 여성 을 비롯한 민간인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선임방법 개선 및 직선제 활성화 통·반장 선임이나 재선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 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 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선출시 직 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직장어린이집 관리주체 개선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이 실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행정지원원국	총무과	<p>있는 바, 국공립보육시설과 형평성 있게 조치하고 관리주체를 총무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세마을 이동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결산이나 정산을 철저히 했을 물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람. 장학기금 운용방법 개선 현재 총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천시 장학기금과 시민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천시 자립장학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 장학기금에서는 중학생에게 1인당 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부천시 자립장학기금에서는 중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과와 협의하여 개선하기 바람. 각종 사업추진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근절 연초에 계획을 세운 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추진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책입안시 입안단계부터 추진방법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민방위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율방법대 운영 및 관리 철저 주민자율방법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자율방법대 관련 예산집행과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행정부처	민방위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내실화 노후건축물이나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재해관련기금 운용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복구 또는 대응조치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하시기 바라며 부족 한 민방위장비는 빠른 기간 안에 확보하고 민방위장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 기 바람.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행정 효율성 제고 토지정보시스템과 세무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바라며 예산절감과 아울러 경쟁 력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및 Y2K 문제 해결방안 강 구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평가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의 우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무원 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고 부천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를 수시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또한 Y2K 밀레 니엄 버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지환경국	시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 <p>점자도서관 신축공사 부지 및 용역비용이 사전검토 불충분으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p> • 비법정 저소득층 주민 보호대책 강구 <p>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p> • 생활보호업무 추진 철저 <p>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하여 책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보호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와 신청 당일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민복지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수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그 동안의 관행을 탈피해서 신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책정하여 어려운 시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 개선 <p>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그 규모면에서나 연간 소요될 막대한 운영비에 걸맞게 부천시민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나 운영방법,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의 목적이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할</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지 환 경 국	시민복지과	<p>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복지정책 수립추진 9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17.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100억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관련업무를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함으로 인하여 부천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없이 일관성 없는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의 활성화를 통한 팀내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복지업무 종사 인력 보강과 동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본청에 배치하고 사회복지 전문공무원과 정기적인 복지정책 관련 논의를 통하여 전문역량을 보완하고 전문가집단과의 정책협의 보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공무원 및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람. 아울러 부천시의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복지관 건립이나 복지서비스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모든 부천시민이 균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탁시설 및 복지법인 지도감독 관리 철저 위탁시설과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사회복지관의 재단 전입금이 적거나 전무한 경우가 있는데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시 법인의 재원전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민원(행정)상담위원 제도 개선대책 강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지 환 경 국	시민복지과	<p>민원상담원과 전철역 시민봉사실 및 구청 민원상담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지출이 많고 구조조정과 IMF로 인한 예산긴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민원상담원의 상당수가 정년퇴직공직자로서 70세가 넘는 고령자이므로 업무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p>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결산이나 정산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내실화 <p>부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조례상 연 2회 개최도록 되어 있는데 97년에는 연 2회에 걸쳐 서면 심의만을 함으로써 관련예산을 불용처리 하였고 98년에는 1회에 걸쳐 서면심의만 하였는 바, 조례상 위원회에서 심의내용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 사업심의,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데 부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례상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철저 <p>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기반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에 장애인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시민복지과	<p>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청과 3개 구청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소관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p>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그룹홈 추진 철저 <p>노인그룹홈 사업효과가 당초 목표에 못 미치고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있었음에도 정책입안시 검토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당초 5인을 개소당 입소키로 했으나 개소당 3인이었고 영구임대APT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p>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업 추진 철저 <p>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수요 현황의 파악을 통한 보육시설 수를 추계하고 그에 따른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보육정책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육계의 현실임.</p> <p>그리고 보육형태와 관련해서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등의 다양한 보육형태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민간시설이 담보하기 어려운 보육형태를 시립보육시설 등에서 갖추어 나가는 다양한 보육형태 확충계획을 입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안조차 잡혀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p>	
경	여성복지과		
국		<p>따라서 보육형태 욕구조사를 통한 확충계획을 세워 시립보육시설 위탁시 특정, 특화해 나가는 행정이 요구되며,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무천시 보육정책의 입안, 행정 집행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지화	여성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 운영개선 및 윤락여성 대책 강구 경로당의 난립으로 운영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한 건물에 위층과 아래층을 두개의 경로당으로 승인하고 있어 이질감이 생기고 있는 점과 경비의 이중지출, 통합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문제점 등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하기 바라며, 윤락여성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 결식아동 보호대책 강구 IMF 한파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최근 결식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복지과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아동 및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 여성취미교실 및 주부취업교실 운영 내실화 여성취미교실과 주부취업교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과목이 중복되어 있고 같은 과목의 교육비가 시와 각 구청이 차이가 심한데 과목을 통합하고 같은 과목의 교육비를 통일해야 할 것이며 구별로 특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경국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거리 농구대 효율성 제고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백보드를 1개만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 성무정 개·보수 예산집행의 비효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불가로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취소를 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는 바, 성무정 개보수와 관련하여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9억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2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지 환 경 국	문화체육과	<p>년이 넘게 방치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기본계획과정에서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은 크나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사회체육센터 시민 활용방안 강구 <p>사회체육센터를 오정초등학교에 건립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학교에 건립하게 되면 시민에게 개방이 어렵고 학교시설로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체육회 운영개선 및 지도감독 철저 <p>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시 행정부의 관리부실로 예산사용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은 시민의 혈세를 관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할 것임. 앞으로는 예산지원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결산시 집행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화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체육회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p> <p>첫째, 사무국장이 개인적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전화기 대금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휴대폰 개인사용대금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함.</p> <p>둘째, 98.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집행의 정당성을 위해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불가피한 경우 집행내역을 사후정</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지		<p>리하게 되어 있으며, 특수활동비는 격려, 위문 등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하나 용도가 지정된 경우 신용카드나 그에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영수증 첨부가 어려워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정리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98년 4월 8일 집행한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아무런 내역도 없고 사무국장이 전결처리하였으며 수입지출장부에는 98년 4월 18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음. 또한 특수활동비로 98년 4월 8일 체육회 이사인 김○○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급양비로 98년 6월 12일 같은 사람에게 격려조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장부기재는 수입지출장부에는 격려비로 하고 회계장부는 급양비로 처리하는 등 회계상 오류 발생.</p>	
환경	문화체육과	<p>셋째, 인건비와 관련 편성지침상 정액급식비는 월 80,000원임에도 10만원이 지급되었고 체력단련비도 월 급여의 250%(편성지침)임에도 3,276,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수활동비도 공무원 월 10만원(5급 기준)임에도 15만원으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음.</p> <p>넷째, 체육회 규약 중 총회라 칭하는 기구를 체육회의 이사로 구성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가맹단체 회장으로 구성 함은 체육회 이사의 구성 취지와 무관하게 편의적 발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임. 또한 체육회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이사의 임무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체육회 이사가 후원금을 내는 것 외에 그 기능이 없는 바, 명칭과 기구 기능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총회를 3월에 개최함으로써 1~3월 사이에 개최해야 할 경기 등에 적용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p>	
경국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지 행 정 국	문화체육과	<p>다섯째,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액의 범주에서 사용치 않고 자부담액을 임의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산이 임의지출될 여지가 있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체육복 등을 구입하면서 업체간 자료, 샘플 등에 대한 충분한 비교평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임.</p> <p>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감사실과 협동으로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감사실과 협동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체육관 앞 주차장 내 불법상행위 근절 <p>부천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한덕생명컵 배구대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바로 그때 위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야시장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대회유치를 통한 부천시 위상제고와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에 막칠을 한 사례가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p> • 시립예술단 운영내실화 및 시민접근성 강화 <p>부천필이 시민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누차 있었고 따라서 작은 음악회 등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현장방문 연주회 5회, 청소년합창단 뮤직캠프를 2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현장방문연주회 2회, 청소년 합창단 뮤직캠프 1회로 실적이 미비한 바,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필이 되어야 할 것임.</p> •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 추진 <p>매년 개최되는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통·반장 위주의 체육</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지	문화체육과	<p>대회가 아니라 일반 보통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부천시민의 체육대회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p>차범근 축구교실 등 체육관련 예산이 연초에 예산액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진행이 하반기에 와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또한 부곡초등학교 운동장의 잔디구장 조성비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되어 시민의 혈세 낭비 가능성이 많으므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바람.</p>	
환경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 <p>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이 되지 않아 신흥동 일대의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하수도가 막혀 생활하수가 범람하게 되고 호우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람. 또한 보광산업을 비롯한 심각한 공해배출업소와 관련하여 공업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므로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속한 이전 조치를 하기 바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폐수배출업소 및 소각로 단속시간을 주간 중심에서 야간 중심으로 변경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사업 예산낭비 근절 <p>용역이 사장되고 예산낭비만 되고 있는데, 용역발주시 수시로 용역팀과 발주자인 관계공무원이 토의를 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용역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만하고 형식적인 중간보고와 형식적 의견 개진으로 인해 발주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초래되었</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환경위생과	<p>는 바, 특히 음식물쓰레기(집중식 압축분쇄 및 다단계 건조방식) 처리설비 연구용역비 2억 8천만원이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실현 가능성이 않은 용역으로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바람.</p>	
지	녹지공원 관리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수요 예측 판단 잘못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 초래 도시경관림조성공사 예산 101,000천원을 98년 8월 28일자로 자금을 수령하고 98년 11월 17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상태로 보통예금 이자율 1%에 예치시켜 결국 이자수입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는 자금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산림수종개선 연구용역 활용 도시경관조성(산림수종개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서를 충분히 행정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용역팀의 자문을 향후에도 반으면서 산림수종개선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를 96년 10월 30일에 설치하고도 그 동안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따라서 향후 위원회 전문가들로 잘 선정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녹지공원관리사업소의 정책자문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 조경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 조경사업에 관한 개약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복 지 환 경 국	녹지공원 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p>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경쟁입찰과 수의계약금액의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침이 아니며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바, 특히 조경사업은 3, 4월에 집중되는데 녹지조성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분기별, 또는 성격이 같은 사업별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임.</p> <p>또한 같은 사업을 둘로 나누어 5,000만원 이하로 만들어 수의계약을 하는 처사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사비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경쟁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사업별로 경쟁입찰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녹지조성계획을 제대로 세워 조경사업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공사 부실방지 및 수목활착 방안 강구 <p>공원 조성시 수목이 활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조성되어 배수가 안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당시부터 수목 활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조경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 활성화 도모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방안 강구 <p>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서교실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부나 정년퇴직한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 모색 <p>도서구입비지출 및 인력비용 절감 등 예산의 절감과 시민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보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원의 적출물 지도단속 철저 <p>병원, 의원의 적출물 처리실태 점검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처리실태 점검을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하지 말고 수거운반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지도점검이나 단속시에는 점검표에 의하여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처리적출물의 양이 극히 적은 업소나 적출물 불법처리업소로 의심이 가는 업소를 적출물 처리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p> <p>이러한 지적사항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당한 사항으로 병·의원의 적출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형식에만 그치는데,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세균성 물질이 감시, 감독 소홀로 인하여 처리업체가 처리하지 않고 일반업체가 처리하면 김포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추후 병·의원의 적출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 증가에 대한 대책 강구 <p>결핵환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특히 소사구의 소사, 시은, 정명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전염성이 강한 결핵의 전염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품구입 및 보관 사용 철저 <p>약품 구입시에는 예상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낭비나 한 번 구입한 약품을 3~4년 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임.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약품 처리를 위해 처방하는 행위나 약품 소요판단 잘못으로 약품이 부족해서 처방을 못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실태가 부진한 바,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연초, 또는 분기초에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과 예방 차원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함. 보건소 특화사업 홍보 철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이 전 시민에게 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합동으로 종합홍보계획을 세워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람. 방역소독 관련 예산집행 부적절 보건소의 방역소독 예산 편성시 약품, 유류 재고량을 판단하지 못하여 도비보조금 예산을 70% 이상 반납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건	원미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무감시업무 철저 원미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의약무감시업무를 해당협회와 연합하여 점검하는 자율지도보다도 공무원이 직접하는 정기점검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건소의 단속의지가 약하다는 것이고, 또한 의료기관 단속현황이 97년은 27건, 98년은 10건이고 약국 단속현황은 96년은 31건, 97년은 28건, 98년은 12건으로 올해 단속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의약업무단속이 보건소 기능 중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보건소장이 숙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의 단속의지 미비로 인하여 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하기 바람. 치과진료업무 개선 운영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진료 업무가 보건소의 설립취지대로 예방이나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보건소	소사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병진료사업의 특화사업 전환 <p>성병진료사업을 확대하여 음지에서 숨어 지내는 윤락여성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p>	
	오정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사업 개선 및 구강불소화 사업 확대 <p>특화사업인 방역사업이 전시적이고 효과가 없는 바, 환경공해가 적고 효과가 많은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연막소독의 사업은 이제 10%의 효과와 광범위한 지역에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99년도부터는 중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또한 구강 불소화 사업이 전시민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기 바람.</p>	
원미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행정능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p>현재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시정 5년과제”, “10대전략”, “100대 중점사업”을 통하여 시정의 중·단기적 목표를 정하고 정책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 원미구에서도 나름의 구정목표를 통한 행정이 집행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음으로 향후 시와 같은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원미구 특성에 맞는 목표 속에 활력있는 구정을 펼쳐가기 바람.</p> <p>또한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즈음 시에서는 내년부터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과별 홈페이지 구축 등의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p> <p>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원미구에서도 공무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연초 보고한 직원간의 자율토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이라는 특수시책조차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공통	<p>앞으로는 공무원 행정능력의 강화를 규정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을 요구함.</p>	
원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학계 인사를 우선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중 법조계나 학계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개최는 징계의결시에만 외부 인사와 같이 개최하고 승진, 전보, 우대승진시에는 자체공무원만으로 심의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 사무인계인수 규정 준수 사무인계인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무인수인계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제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람. • 간부공무원 지역순찰제 실효성 제고 담당공무원의 지역순찰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의 하나로 판단되는 바,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현장에 접근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통장 선임방법 개선 및 직선제 활성화 통·반장 선임이나 재선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원		<p>설정인 바,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선출시 직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율방법대 운영 칠자 <p>주민자율방법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흡한데 우수한 자율방법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법대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체토록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원수와 순찰상황, 범죄예방활동 실적에 맞추어 동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우범지역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p>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 시민이 쉽게 공개대상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용하도록 정보공개장소를 개방하고 주요문서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자세로 임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는 시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방침 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위협의회 운영 개선 <p>각 동방위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성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 근무위치 변경 및 동장실 활용방안 강구 	
미	총무과		
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원		<p>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바, 동장실을 2층에 별도로 두지 말고 동장도 1층 사무실로 자리리를 배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임하고 동장실을 직원 휴식공간이나 민원인 접견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한결음 더 앞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수행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p>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2번 이상 부적합 판결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을 방지하여 인근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강사 수당 집행 철저 <p>생활체육·문화취미교실 중 생활체육의 에어로빅, 기공체조 운영에 있어서 에어로빅 수당 지급문제와 기공체조 강사수당이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철저 <p>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통장들은 생활이 안정된 사람으로 그러한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한 번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1명의 통장에게 2자녀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로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하기 바람.</p>	
미	총무과		
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원	시민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감독 철저 최근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내실화 실무종합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후견인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작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바람.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가 없음으로 인하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감독부서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람.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 철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의 사회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건전 청소년 육성 및 학교폭력근절운동 추진 질서 건전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업무파악과 인수인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근절 추 	
구	사회복지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원 미 구	사회복지과	<p>친협의회 부분에서 조직구성과 활동사항을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하나의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됨.</p> <p>또한 하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분산되어 있어 업무에 효율성이 없고 지도관리감독이 안 되므로 하나의 부서로 통합을 통한 올바른 조직구성과 철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원래의 사업목적인 범죄예방과 학교폭력근절운동이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법정 저소득층 주민 보호대책 강구 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홍보 철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장제보호비 지급 철저 장제보호비는 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신청일로부터 즉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홍보 철저 의료보호대불금제도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원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 컴퓨터게임장업 등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도모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 • 보복적 식품위생단속 지양 식품위생단속이 물가단속 불응자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바, 추후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음식점 자율감시체와 관련하여 위생감시업무를 해당협회에 위임함으로써 동종을 경영하고 있는 협회 회원인 대상업체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사항인 만큼 앞으로는 이를 감안하여 지도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 • 퇴폐·유해업소 단속 철저 IMF 한파로 인하여 오히려 퇴폐·유해업소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법권 행사로 퇴폐·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랍. 	
미			
구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철저 명예감독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실제 현장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통·반장 등과 시의원을 복수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주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시행하기 바랍. •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철저 어린이공원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점검과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원미구	건설과	<p>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사업 경쟁입찰 방안 강구 <p>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수목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경쟁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기별, 사업별로 경쟁입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소사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p>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되는 감사자료나 요구자료 또는 보고자료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데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임.</p>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 <p>인사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인계인수규정 준수 <p>사무인계인수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무인수인계시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제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 근무위치 변경 및 동장실 활용방안 강구 <p>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바, 동장실을 2층에 별도로 두지 말고 동장도 1층 사무실로 자리리를 배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임하고 동장실을 직원 휴식공간이나 민원인 접견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장 선임방법 개선 및 직선제 활성화 통·반장 선임이나 재선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선출시 직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주민자율방법대 운영 철저 주민자율방법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흡한데 우수한 자율방법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법대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체도록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원수와 순찰상황, 범죄예방활동 실적에 맞추어 동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현재 분기별로 평가하여 소모품비를 2만원 차등지급하나 평가자체도 형식적이고 지원액의 차이가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음) 또한 우범지역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간부공무원 지역순찰제 실효성 제고 생활민원 사전해결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지역순찰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의 하나로 판단되는 바, 이왕에 실시하려면 동 담당자가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여 주기 바람. 공무원 정보화 직무능력 제고 및 팀제 활성화 도모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능력 향상이 절실함에도 그에 따른 교육이 미흡한데, 현재 부천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1인 1PC운동, 경쟁력 있는 행정을 통한 세계화, 각과 구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화 및 부천정보센터를 통한 공중망 구축 등 정보화와 관련하여 급변해 나가고 있음. 	
사			
총무과			
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소 사 구	총무과	<p>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전산교육 실적이 4회 80명이라는 것은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쫓아가기에 급급한 행정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팀제의 도입에 따른 조직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세분화된 조직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하는 등 팀제를 도입하였으나 팀제의 활성화를 위한 과별 토론이나 외부장사 초청강연 등의 논의구조가 없음으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있는 골목조성사업 활성화 도모 <p>특색있는 골목조성이란 특화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여서 청소나 가끔 하는 현재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완하고 활성화시켜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진정 특색있는 골목을 조성하고 나아가 특색있는 동을 만들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위협의회 운영 개선 <p>각 동방위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성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감독 철저 <p>최근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p>	
	시민봉사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소 시	시민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친절도 제고방안 강구 추진 대민친절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친절한 직원을 주민이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병역의무자 경비 지급 철저 병역의무자 경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불용처리되고 있는 점은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니 시급히 개선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아동 보육지원대책 강구 현재 저소득층 아동이 시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때의 보육부담액을 비교하여 보면 2세 미만 아동기준으로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시립보육시설은 무료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65,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기타 저소득층인 경우 시립보육시설은 91,000원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219,000원을 부담해야 함. 즉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시설장이 일정액을 경감해준다고 하여도 시립보육시설보다 많은 보육부담이 들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시립보육시설 취원율이 낮은데 IMF를 맞이하여 경제난이 가중되는 시점에 저소득층 아동이 시립보육시설에 취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 철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의 사회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비법정 저소득층 주민 보호대책 강구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사 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소	사회복지과	<p>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여성취미교실 운영 <p>여성취미교실이 타 구청에 비하여 실적이 미흡한데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타구청과 연계하여 과목이 중복되지 않고 구별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p>	
사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p>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 컴퓨터게임장업 등을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만화방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현재 만화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저질 성인만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대여 및 구독불가란 팻말이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어 청소년들이 저질 성인만화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폐·유해업소 단속 철저 <p>퇴폐·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IMF 한파로 인하여 오히려 퇴폐·유해업소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사법권 행사가 한 건도 없는 것은 사법권을 준 의미가 없는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법권 행사로 퇴폐·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p>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저조해지고 있는데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소사구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환경오염개선대책 강구 및 보복적 식품위생단속 지양 <p>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재래식 화장실을 법적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음.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식품위생단속이 물가단속 불용자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바, 추후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p>	
구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p>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공무원의 임의로 누락되거나 지적내용이 변경되어 감사처리결과보고서로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차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철저 <p>명예감독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음.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과 기본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p>	
오정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 추진 <p>구청장 업무보고시 밝힌 구정역점시책은 구정의 전략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사항에는 구정역점시책에 대한 실적은 별로 보고되지도 않는 등 구정역점시책 따로 추진 실적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구정의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중·단기적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고 구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공통	<p>향후 시정 5년 과제 10대 전략과 같은 중·단기적 계획을 구정에도 적용하여 거듭나는 구정이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함.</p> <p>그리고 관내의 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검토하여 유명무실하고 효과없는 사업들을 매년 되풀이 반복하지 말기를 바람. 또한 공직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p> <p>또한 오정구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하여 환경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관내의 상습침수지역과 삼정천변의 농지가 집중호우기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p>	
정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위원회 운영 철저 <p>인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 2명을 위촉한 것은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개최된 총 8회의 인사위원회 개최시 단 1회만 민간인이 참석한 것은 위원회 구성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행정이며 또한 공무원 징계의결시에만 민간인을 참석시키고 나머지 승진, 임용 등은 자체공무원으로만 심의한 것은 장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볼 수도 있기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p>그동안 인사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공무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게 되는 바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교육계나 법조계의 민간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인계인수규정 준수 사무인계인수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후임자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승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사무인계인수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과 부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의 제규정을 철저히 지키기 바람. 	
정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장 선임방법 개선 및 직선제 활성화 통·반장 선임이나 재선임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행하지 않고 통장이 직접 반장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통장이 선임한 반장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난 2년 동안 266개 통 중 반장 추천 방식은 42건, 주민직선은 2건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장 선출시 직선제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율방법대 운영 철저 주민자율방법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미흡한데 우수한 자율방법대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잘못 운영되는 자율방법대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체도록 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인원수와 순찰상황, 범죄예방활동 실적에 맞추어 동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우범지역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순찰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간부공무원 지역순찰제 실효성 제고 담당공무원의 지역순찰제는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의 하나로 판단되는 바,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현장에 접근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p>행정정보공개 전수가 6년 밖에 안 되는데 구청의 행정정보 공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 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반 시민이 쉽게 공개대상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용하도록 정보공개장소를 개방하고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자세로 임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현실을 보면 주요문서목록은 97년판으로 올해는 아예없고 시민봉사과에 알립판조차 없어 시민에 대한 홍보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시정방침 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p>	
정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위협의회 운영 개선 <p>각 동방위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성이 법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p>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p>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2번 이상 부적합 판결을 받은 비상급수시설을 방치하여 인근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강사 수당 집행 철저 <p>생활체육 문화취미교실 중 생활체육의 에어로빅, 기공체조 운영에 있어서 에어로빅 수당 지급문제와 기공체조 강사수당이 중복되어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철저 <p>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통장들은</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총무과	<p>생활이 안정된 사람으로 그러한 통장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한 번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있고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선정한 경우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한 사람에게 4년 이상 연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바, 차후로는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 근무위치 변경 및 동장실 활용방안 강구 <p>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바 동장실을 2층에 별도로 두지 말고 동장도 1층 사무실로 자리리를 배치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임하고 동장실을 직원 휴식공간이나 민원인 접견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p>	
정	시민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감독 철저 <p>최근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행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전의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내실화 <p>실무종합심의회 개최가 미흡한데, 모든 복합민원에는 실무종합심의(관계공무원 회의)를 거쳐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만 협의를 거치고 있음. 또한 민원 후견인제도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는 복합민원에도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실무종합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정 구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모니터 제도 개선방안 강구 <p>오정구 특화사업인 학생모니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모니터합 제작비 150만원, 엽서제작비 62만 5천원으로 총 212만 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엽서가 우송된 것은 6건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엽서 1장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이 제도는 비용보다 효과가 적은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p>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 철저 <p>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로 의결되는데 그 개최일수가 올해에는 98년 3월 7일과, 4월 7일, 9월 29일로서 3회밖에 개최되지 않고 있음.</p> <p>생활보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어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시행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의 사회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p> • 비법정 저소득층 주민 보호대책 강구 <p>실질적으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여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p>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홍보 철저 <p>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집행액이 예산액의 67.8</p>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p>%밖에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인 바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제보호비 지급 및 의료보호대불금제도 홍보 철저 장제보호비는 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신청일로부터 즉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지 7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의료보호대불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철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100분의 2 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무고용업체 내역에 300인 미만 사업장인 제텍스가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종업원이 450명(부천상공총람 자료)인 한국화장품은 빠져 있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그 현황 파악조차 전화로 문의하는 등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봄.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현황파악을 소홀히 하는 등 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차후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지적함. 	
정	사회복지과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폐·유해업소 단속 철저 IMF 한파로 인하여 오히려 퇴폐·유해업소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법권 행사로 퇴폐·유해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국	과		
오 정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 컴퓨터게임장업 등을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만화방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현재 만화방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저질 성인만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대여 및 구독불가란 뗏말이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어 청소년들이 저질 성인만화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적극적인 환경오염개선대책 강구 및 보복적 식품위생단속지양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재래식 화장실을 법적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음.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식품위생단속이 물가단속 불용자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바 추후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철저 명예감독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실제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에 대한 신뢰감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로 시행하기 바람. 재해대책 장비 점검 철저 재해대책 관련 장비활동에 있어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등 재해복구 장비를 파악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경사업 경쟁입찰 방안 강구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수목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경쟁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기별, 사업별로 경쟁입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건의사항

관련부서		건의사항	비고
국	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환경의제21 주무부서 조정 부천환경의제21은 협의적 환경이 아닌 광의적 환경으로써 복지, 교통, 문화 등을 총괄하는 광의적 환경으로 정책개발 경험에 적은 환경위생과에서 주무부서가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측면이 있고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주체가 된다 하면 이점을 적극 고려 광범위한 집행부 내의 의견과 행정경험을 수렴해 나갈 논의 단위를 구성하기 바람. 	

4.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98.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으며 수감받는 관계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경제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는 예산절약과 내핍생활에 솔선해서 앞장서 주기 바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임.

<건설교통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일반사항

가.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로

○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하여 시민 생활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나. 감사기간

98. 11. 26. (목) ~ 12. 2. (수) (7일 간)

다. 감사실시대상기관 : 28개 기관

○ 건설교통국 :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

○ 복지환경국 : 청소사업소

○ 각구청 :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라. 감사반 편성

○ 감사인원 : 12명(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편성

위원장	간사	위원장	사무보조직원
김종화	김대식	김삼중, 김상태,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 전문위원 : 한창희 ○ 직원 : 정희남 ○ 속기사 : 김현정, 신미화

마.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대상기관	장소	비고
98. 11. 26(목) 10:00~	원미구	구청회의실	보고 및 감사
98. 11. 27(금) 10:00~	소사구	"	"
98. 11. 28(토) 10:00~	오정구	"	"
98. 11. 29(일) 10:00~	감사 중간보고서 취합(후회)		"
98. 11. 30(월) 10:00~	건설교통국	건설교통위원회실	"
98. 12. 1(화) 10:00~	상하수도사업소	"	"
98. 12. 2(수) 10:00~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	"

2. 주요감사 실시내용

관련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수립 및 시설결정추진현황 ○ 택지개발 및 공시지가 조사 ○ 개발제한구역 및 체비지관리, ○ 도로개설, 도로유지, 도로점용 관리 ○ 교통행정종합계획 및 교통운영개선사업 ○ 건축허가 및 대형건축물 관리 ○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지 분석 및 투자이익 개발사업 추진 및 재개발 사업 ○ 공공기관 신축 및 안전관리 ○ 차량등록관리 	각 구청 포함
상하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 상수도 누수 및 원가 관리 ○ 상하수도요금 및 재수수료 부과·징수 ○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행정 종합계획 ○ 쓰레기 종량제 업무 수행 ○ 자원재활용 계획 	

3. 감사 결과

가. 시정 요구 사항

관련부서	시정 요구 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용역 발주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자체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동설계팀, 설계기술담당관 등을 구성 운영하여 예산 절감 및 공사 지연 방지 대책 마련 시급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해제, 상동택지개발, 재개발 등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상되니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 필요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의 신중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질저한 자료조사, 주민여론 수렴, 예산의 단계별 편성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필요

관련부서	시정요구사항
도로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명예감독관제, 공사행정예고제의 확대 및 정착 대책 필요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도 추진 필요 •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획기적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부서의 일원화 및 보안등의 일체 점검 필요 • 민간전문업체 위탁 관리 방안 적극 검토 ○ 도로굴착공사의 사후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시행청과 관련부서간 이해 부족으로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필요 •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제작단계부터 관리 필요 ○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전화부스,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 강구
교통행정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합리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정공단 앞 무인카메라 설치 위치 변경 및 서울·인천파의 운영시간 부조화로 시민불편 초래에 대한 제도 합리적 조정 필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규정 및 이의신청 심의 기준 엄정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흐름의 상황판단 및 주차시 위험지구 등을 고려한 단속 필요 • 주정차 단속일지의 철저한 관리 및 기재 필요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필요 • 자동차 검사, 인·허가등록시 납부 경유제를 실시 해결 방안 모색 ○ 녹색교통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위주의 녹색교통 추진 계획 수립 필요

관련부서	시 정 요 구 사 항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주차장 갖기 운동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추진 필요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및 관리 철저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교통행정 협조 체계 구축 • 각종 교통시설물의 제기능 유지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와 시설물이 설치 효과 증대 도모 ○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결유지 및 안전점검 철저 ○ 불법주정차 및 과적차량 단속시 공무원 동행 철저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비리 근절대책 시급 마련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 • 수동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정기 및 수시, 유관기관 협동단속실시 및 단속과 계도 병행하여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마련 ○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조치 불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강력대책 마련으로 주차난 해소 기여
도시개발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농지구 미매각 용지에 대한 대책 시급 마련 • 토지가격의 재조정, 상업용지 용도의 완화 등 기획적인 대책 마련
차량등록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검사미필 차량 관리 철저 • 교통안전진흥공단과의 업무 이원화로 초래되는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상하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공사와 대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필요 ○ 수질관리 및 검사의 일원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조속한 추진으로 행정낭비 요소 방지 ○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배수관, 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속적인 누수탐사, 계량기 적기 교체 등으로 수돗물 낭비 및 누수율 최소화 대책 마련 ○ 급수불량지역 시설개선사업 추진 철저

관련부서	시정요구사항
상하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강화, 상수도 시설을 위한 시설비 용자 및 지원 적극 시행 ○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속 추진 •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통보시 수질검사 결과치를 기재한 통보서를 시민에게 통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관정관리에 관한 대책 마련 • 무허가·미신고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일제 신고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정리 조치 필요 • 사용되지 않고 있는 관정,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관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 필요 ○ 불량하수관 및 낮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대책 • 침수 및 수해 지역에 대한 대책 조속 마련
청소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대행업무의 적정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급·대행의 이원화 청소체계를 일의 양에 기초한 일원화 체계로 개선하여 청소비용 절감 도모 ○ 정화조 업무의 획기적 개선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수거되는 오수·분뇨의 양과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되는 양이 일치되어야 하나 계측기 미확보 등으로 비교할 수 없어 정화조 처리의 계량화 필요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업소인 권장업소 및 의무대상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 부천시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기 시설의 확대 방안 적극 강구 ○ 소형 소각로 지도 감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 등에 의한 정례적인 지도 감독보다는 수시 지도 감독으로 대기 오염 방지 대책 도모 ○ 청소관련 노조와의 원만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관련부서	시정요구사항
청소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노조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 적극적인 시정 또는 개선을 바라며 • 특히 조직개편으로 구청으로 이관된 재활용 수거체계는 신중히 재검토하여 일원화 체계를 고려할 것. ○ 각종 청소장비의 신중한 구입 및 사용효과 증대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청소장비(음식물쓰레기 압축기, 캔 압축기, 진공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등)의 신중한 구입으로 사용효과를 증대토록 할 것. ○ 체계적인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음. 2000년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동을 대비하여 쓰레기의 성상별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토록 할 것. ○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량 제고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용 규격봉투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공공용 규격봉투의 보급기준을 강화하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 증대에 노력하기 바람. ○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행위 근절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길 및 공한지 등에 일시적으로 불법·무단쓰레기가 발생하면 고질적인 무단투기 행위가 지역화 되고 있음. • 무단투기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활동 및 조기 수거 체계를 확보하여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 ○ 병원 적출물 처리 철저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의 수술을 실시하는 병원 등에서 수술적출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돗물과 함께 하수도로 무단 방류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기금운용의 관련 조례에 따라 적기 적소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사업 즉시 의회 제출 필요

나. 처리 요구 사항

관련부서	처 리 요 구 사 항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국도 주변 차량 진·출입구 도로접용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주변 차량 진·출입구 도로 접용 부분과 버스전용차선과의 상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불편 조속 해소
교통행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곡복개천 등 유·무료 노상주차장의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 주차장의 무단 접용과 주차 방해 장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로 일반시민의 주차 불편 해소 ○ 송내, 소사역 택시 승강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승강장의 설치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및 시민 편의 도모 ○ 창영초등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민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 조속 설치요망 ○ 역곡역 출구 내 잘못 표시된 이정표 조속 정정 ○ 소사남부역사거리 대왕약국 앞 교통흐름 개선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국도의 원활한 교통흐름의 저해요소인 동 지역의 교통흐름 개선의 조속한 조치 필요
청소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민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심곡고가교 주변)의 미설치로 시장 영세상인 및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음, 조속 설치 요망

다. 건의사항

관련부서	건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니냐현상'으로 금년은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하는 바 동절기 설해 및 빙판길, 상하수도의 동파 대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청장 참석 조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와 구의 중요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도모로 상호간 정체 보완 필요 ○ 대형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

관련부서	건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알권리 층족 필요 ◦ 시 본청, 사업소, 구청간의 업무협조 등 기능 조정 • 기관 및 부서간 상하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협조 기관으로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 대두 (예, 음식점 허가시 정화조 처리용량 미달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행위) ◦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철저 • 각 부서별 업무분장 내에는 부서별 종합계획수립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획이 수립된 부서가 전무함. • 각 부서에서는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 후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GIS 사업 추진 철저 • 도시의 지리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과 부천시의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함. •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계의 신설, 각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 모색, 예산 투자 등으로 가시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풍치지구 해제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한 부천시의 도시관리 방향, 도시관리 지침, 관련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반영 • 주거풍치지구 해제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예고 필요 ◦ 소사동 32번지(분도수녀원 앞)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의 불균형 발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부지를 주차장 및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 필요 ◦ 옥산로 주변 고등학교 유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곡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타지역으로 통학하는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봉지지구해제, 옥산로 개설 등과 병행 동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적극 협조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조사방법 개선

관련부서	건의사항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중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열람기간 동안 민원인이나, 동을 방문하여 열람할 여유가 없는 바 • 개인별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시민에게 개별 통지하여 열람을 대신함으로써 이의신청 최소화 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에 대한 행정 배려 •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주민들이 생활을 예측하고 거주할 수 있는 행정의 배려로 불편 최소화 도모 ○ 채비지 관련 조례 정비 • 현실성 없는 대부료 조정 및 대부계약의 완화로 채비지를 점용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을 위한 조례 완화 필요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대~신월동간 도로계획 전면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예산 소요, 300여개의 중소업체 공장 용지 편입으로 기업활동 저해, 도당산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요망 ○ 옥산로 개설에 따른 병목지점 교통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산로의 역곡동 접속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시급 마련 ○ 온수고가교 설치 계획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고가 사거리는 경인국도상에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므로 교통량을 재평가 후 입체고가차도 설치계획 재검토 요망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전산화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전산화하여 주차시설, 밤샘주차 단속 등 관리 자료로 사용 ○ 자전거 도로 지도 제작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이 설치된 자전거 도로망과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시설 등을 지도에 명시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제작 요망 ○ 마을버스 허가 및 중차 확대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승객 숫자만을 고려하여 지정됨으로 인하여 소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소외지역 또는 오지지역 주민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부서	건의사항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 증차 또는 신규 허가를 위하여 관련법의 확대 적용으로 시민 불편 해소 요망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신도시 내 도시설계지침 개선 및 정비 방안 강구 • 균형생활주택의 건축 및 단독주택 옥탑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설계 지침 개선 요망 ◦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 단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 • 공동주택 내부구조 단속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은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이의 개선 요망
차량등록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개선 방안 강구 • 자동차 정기검사시 동일조건의 동일차량을 검사하는 경우 개인이 검사를 신청하면 불합격되나 카센터 등 대행업체에 대리 의뢰하면 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바 • 교통안전진흥공단과의 유기적 협조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망
소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사구청 내 멀티미디어 도서관 시설 요망 • 소사구 역곡3동, 괴안동, 소사본동 지역에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 소사구청사 내 다수의 소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도서관을 설치하여 문화 욕구 충족 도모

4. 기타 감사 의견

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철저

-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 정책적 감사 등으로 이루어져 행정기관의 감사와는 감사 성격의 차이가 있어 수감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수감자료의 미제출, 현황 불일치, 누락과 답변미숙 등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됨.

나. 건축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시행

- 연면적 50m²(단독주택의 경우 100m²) 이하인 건축물과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500m² 이하인 공장 건물, 견본주택용이나 공사용 등 가설건축물, 용벽 등 공작물에 한해 설계도면을 부천시에서 무료로 작성해 주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신뢰받는 건축 행정 및 시정 구현